
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0. 2. 12





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5
1. 2020년 핵심 추진과제	5
① 상생번영의 산림관리체계 마련	5
②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	8
③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	11
④ 안전한 산림,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	13
⑤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	16
2. 현안 과제	19
①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	19
② 봄철 산불방지 대책	20
IV.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	21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1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.

- (산림자원순환경제) 산림경영과 지역인프라를 연계한 소득창출 기반 마련
 - 경제림 내 산림사업을 집중(19년 71%)하고 우량목재의 생산성 제고*
 - * 우량목재(수확별채, 수종갱신) 단위 생산량(m³/ha) : ('17년) 120 → ('18년) 128 → ('19년 추정) 132
 - 지역경제를 견인할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모델의 발굴 및 확산*
 - * 산림소득 증대형, 지역산업 활성화형, 목재생산형 등 3개 모델 발굴·확산
- (임업인 지원)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도입 및 전문 임업인 지원 강화
 -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도입(19년말 2,612명 등록)으로 직불제 도입 기반 마련
 - 소득사업 지원 대상* 및 임업인 용자지원** 확대로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
 - * 소득사업 지원 대상 : ('18년) 임업인 → ('19년) 임업인 + 임업후계자
 - ** 용자지원 예산 : ('18년) 340억원 → ('19년) 413억원 → ('20년) 618억원(50% 증)
- (산촌) 산촌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시·군 단위 통합계획 수립
 - 산촌활성화지원센터, 산촌진흥특화사업 등의 법적근거 마련(임업진흥법 개정)
 - 국·사유림을 통합한 시·군 산림계획을 수립*하고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
 - * '19년 통합 산림계획 수립 시·군(5개소) : 가평, 홍천, 금산, 순천, 하동
- (평화·번영) 분쟁지역이나 접경국가에 산림을 통한 평화와 번영 확산
 - 산림으로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(PFI)를 국제사회에 제안*
 - * 제14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('19.9월 뉴델리), P4G 리셉션('19.9월, 뉴욕) 등
 - 남북산림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산새숲 캠페인(27회) 및 평화양묘장(고성) 조성

2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.

- (일자리) 자생력 있는 산림일자리 생태계 육성 및 산림일자리 저변 확대
 - 주민주도 경영체 양성(133개) 및 다양한 유형의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* 육성
 - * 사회적경제기업 : ('18년) 120개 → ('19년) 173개 / 16개 영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환
 - 나무의사 배출(52명) 및 산림레포츠지도사 제도 도입(산림휴양법 개정)
 - 산림복지전문업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는 등 창업지원을 위한 규제개선
- (삶의 질)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혁신 및 생활권 내 그린인프라 확대
 - 휴양림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(숲나들e),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* 확대('18년 : 2,046만명 → '19년 2,261만명)
 - * 자연휴양림 이용자 + 산림복지프로그램(산림교육프로그램, 산림치유프로그램) 이용자
 -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(차단숲 53개소, 바람길숲 17개소) 조성 및 정원문화 기반 마련*
 - * '20년 신규 예산으로 정원 실습·보육 공간 조성, 실내·외 정원 조성 사업 확보

3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산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

- (국민안전) 강원도 산불('19.4월) 조기진화 및 산사태 예방·대응 강화
 -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원도 산불에 총력 대응하여 조기진화 완료(2일 소요*)
 - * 대형산불 진화 소요 일수 : ('00년) 9일, ('05년) 3일, ('17년) 4일, ('19년) 2일(13시간)
 - 강원도 산불피해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 강화
- (산림보호) 합리적인 산지관리 원칙 확립 및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
 - 보전산지 내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방지를 위한 「산지관리법」 개정
 -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산림복원 기반 마련 및 산림병해충 피해 감소*
 - * 소나무재선충병 : ('18.4월) 69 → ('19.4월) 49만본 / 일반병해충 피해면적 전년대비 13.3% 감소

Ⅱ.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

1 추진여건

- (임업) 산림의 경제·환경적 가치는 증가하고 있으나, 임업소득은 낮은 수준
 - 산림자원의 성숙과 청정임산물 수요증가*는 임업발전의 기회요인
 - * 청정임산물의 재구매 의향 76.3%, 청정임산물의 잠재적 구매 의향 72%(국립산림과학원, '18년)
 - 하지만, 임업의 경영여건은 열악*하여 임가소득은 농가 대비 86.7% 수준
 - * 임업은 자본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이 낮아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애로
- (혁신) 4차 산업혁명 대응,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임산업 혁신 필요
 -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임산업을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* 할 필요
 - * 임업의 고령화, 인력의존 구조를 혁신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탈바꿈 할 기회
 - 국제사회는 산림의 환경·경제·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(2017~2030 유엔산림전략 계획*, UNFF)
 - *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재화 및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(SDGs)에 기여 필요
- (안전) 이상기후 등으로 산림재해(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) 가능성 증가
 - 산불피해* 최소화 및 선제적인 산사태 예방으로 국민안전 보장 필요
 - *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연중화·대형화 추세 / 산불피해 : (10년평균) 857ha → ('19년) 3,255ha
 - 여름 가뭄, 겨울 고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기간 증가
- (삶의 질) 1인 가구, 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웰빙을 넘은 힐링에 대한 욕구 확산
 - 국민들은 산림(산림휴양, 산림치유 등)을 삶의 질을 높이는 대상으로 인식*
 - * 숲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 75.7%(국립산림과학원, 2018)
 - 산림레포츠, 산림관광 등은 경험소비*와 같은 새로운 여가트렌드에 부합
 - *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가치에 집중하고, 무료로 제공되던 경험의 상품화 가능

2

정책방향

□ 현정부가 지향하는 '사람중심의 산림정책' 가속화

-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여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는 산림관리 체계 마련
- 임업혁신, 일자리창출, 미래먹거리 발굴 등 지속가능한 임산업 체계 구축
-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
-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 확대 및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

□ 2020년에는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

비전

◆ 내삶을 바꾸는 숲, 숲속의 대한민국

목표

◆ 함께 발전하는 임업, 국민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

구분

핵심추진과제

함께
발전하는
임업

①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

산림경영·관리 내실화 / 임업인 경영지원 / 사람·평화·상생번영 체계 확산

②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

지역기반의 일자리 / 산림일자리 창출 지원 / 임산업의 활력 제고

③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

스마트 산림관리 확대 / 혁신성장 기반 구축

국민 삶을
지키고
포용하는
산림

④ 안전한 산림,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

산림재해·국민안전 / 산림생태계 건강성·연속성

⑤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

생활밀착형 숲 /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/ 산림복지서비스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2020년 핵심 추진과제

①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

【과제 개요】

- ◆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모델을 확산하고,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
- ◆ 사람·평화·상생번영을 중심축으로 국제·남북산림협력 증진

【과제 목표】

- ◆ 산림사업(조림, 숲가꾸기, 임도 등)을 경제림에 집중(71% 유지)
- ◆ 임가소득 향상 : ('19년) 3,648만원 → ('20년) 3,830만원
- ◆ 평화산림이니셔티브(PFI)의 UN차원의 아젠다화



선도산림경영단지(전남 보성)

산림경영·관리 내실화

□ 지역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산림자원의 조성·관리 강화

-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임산물 인프라* 확충 및 비즈니스 모델 확산

* 목재가공, 소득지원, 임도 등 지역밀착형SOC사업을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집중 조성

- 지역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림에 조림·숲가꾸기·임도·임업기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산림경영·관리의 효율성 제고

※ 산림사업 규모 : 경제림 조성 등 조림(22천ha), 정책 숲가꾸기(217천ha), 임도 신설(805km)

□ 산림자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내실화 및 국산목재 생산 확대

- 경제림 재편*, 「산림자원법」 전부 개정**(8월 국회제출) 등 산림자원 정책 내실화

* 경제림단지(234만ha)와 임업진흥권역(118만ha) 통합·조정 검토

** 산림사업 대행·위탁기준 정비, 산림경영의 중요성 강조, 기능별 산림관리 방안 구체화 등

- 지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(하베스터, 스키더 등) 운영, 친환경벌채, 불량림수종갱신 등으로 국산목재 생산 확대('19년 추정 : 450만m³ → '20년 500만m³)

임업인의 경영지원 강화

□ (임가소득)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마련 및 임업인 지원 강화

- 임업경영체 등록 실적을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* 마련
 - * 직불금의 지급방식, 지급절차,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
- 임업인의 용자지원을 확대('19년 : 413억원 → '20년 : 618억원)하고,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* 추진
 - * 산림작물생산단지(41개소), 산림복합경영단지(48개소),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(국비 66억원)
- 농·어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림·임업분야 세제 개선 검토

□ (경영지원) 위탁·대리 경영 확대 및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

- 「산림자원법」 전부 개정 시 대행·위탁제도 개선내용*을 포함하고, 시·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(주체 : 지역산림조합) 확대**
 - * 대행·위탁 기관의 구분 및 확대, 선정기준 및 심의회 구성 등
 - ** ('19년) 제천·함양 2개 → ('20년) 경기 1, 강원 1, 충북 5, 충남 5, 경북 3, 경남 6, 전북 2 등 23개
- 동일인의 산림사업 설계·시공을 제한하기 위한 「산림기술법」 개정 추진
-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* 및 임업진흥원**의 경영효율 개선
 - *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, 조합원 가입 자격기준 개선, 산림조합특화사업 성과사례 창출 등
 - ** 사업영역의 다변화, 기관운영의 자생력 확보 등 기관운영 계획 재정비

□ (사유림 매수) 산주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유림 매수 방법 마련

- 고령 산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* 도입 추진
 - *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: 국가-산주 간 매매 계약을 통해 매수금액을 분할(10년) 하여 월별로 지급하고, 지급 종료 후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
- 사유림 매수단가 현실화* 및 백두대간, 도시숲 등 법정보호구역의 우선 매수
 - * 12년째 동결인 매수 단가에 지가 평균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

숲으로 만드는 사람·평화·상생번영 체계의 증진

□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(PFI) 확산 및 세계산림총회(WFC) 준비

- (PFI) 국제기구·양자협력, 시범사업*, 국제행사(P4G) 등으로 UN아젠다화 추진

* 에티오피아 산림복원과 연계하여 커피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의 소득사업 개발

- (WFC)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기본계획 수립(민·관 협력 체계 구축 등) 및 우리나라의 ‘사람중심의 산림정책’ 공유 등을 위한 의제 발굴*

* (가칭) 서울 선언문을 위한 의제 발굴 : 평화, 산림자원순환경제, 녹색웰빙, 산림가치 공감 등

□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를 통한 신남방·신북방 정책 가속화

- 미얀마의 Community Forestry 활성화 사업, 중앙아시아 경관복원 추진

- 한국정부-AFoCO 본부협정(안)의 국회 비준* 및 회원국 확대 지원** 등

* 법인격부여, 본부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, 기구특권·면제 등의 규정

** 몽골, 싱가포르 등의 회원국 참여 독려 / 말레이시아, 중앙아시아 등의 관심국가 홍보 추진

□ 상생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ODA 사업 개발 및 파트너십 확대

- 혼농임업 등 소득사업,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주민참여형 ODA사업 개발

- NGO, 기업 등과 민간 파트너십*을 확대하고 컨설팅 및 정보교류 강화

* 지자체, 공공기관,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민간기업, 환경단체 등

-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콩고분지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(5억원)

□ 남북산림협력은 당국 간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민지지 기반 마련

- 남북산림협력의 단계적 이행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분석 강화

- 양묘장·남북산림협력 센터*를 조성·운영하고, 북한·국제사회 동향분석 및 북한의 주요지역 산림변화 모니터링 실시

*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(4월), 고성양묘장 운영, 철원남북산림협력센터 부지 선정 등

- 새산새숲 캠페인 확대* 및 시민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참여 독려

* 무관심 계층, 일반 국민, 이해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새산새숲 캠페인 추진

②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

【과제 개요】

- ◆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강화, 신규 자격제도 정착 등으로 본격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
- ◆ 규제개선 및 소비자 중심의 임산업 체계 구축으로 임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

【과제 목표】

- ◆ 산림전문업 육성 : ('19년) 10,805개 → ('20년) 11,345개
 - ◆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: ('19년) 173개 → ('20년) 250개
 - ◆ 목재·임산물 등의 온·오프라인 채널 확대*로 소비자 접근성 개선
- * 목재정보서비스 구축,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구축 등



산림일자리(나무의사)

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

- (산림일자리발전소) 지역중심의 산림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모델 확산
 - 그동안 발굴한 경영체(133개)는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, 전문매니저를 추가 배치(10명)하여 경영체 지속 발굴(50개)
 - 일자리 창출의 전문성·지속성을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 안정화 방안 마련
- (산촌) 산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주·일자리 개발 지원
 -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 등*으로 산촌거점권역(5개 권역)을 육성하고, 산림 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(2개소)
 - * 산촌거점권역 육성계획 →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, 지역주민 등의 활동 지원(5개 권역별 1억원)
 - 산촌교육 계절학기(2개 대학), 산촌살기 체험(청년 20명 내외) 등 대학생·청소년의 산촌활동 지원 및 귀산촌인(신중년 등)의 산림경영 교육 실시
- (국유림 활용 촉진) 산촌의 신규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국유림 경영
 - 국유림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(40개소, 200명)
 - 공동산림사업, 국유림 보호협약 등을 통해 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촉진하고,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('20년까지 40개소 발굴)

산림일자리 창출 지원

- (취·창업 지원) 연령별·대상별 산림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·창업 지원
 - 청년, 여성, 시니어·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홍보*
 - * (청년) 주요일자리 동영상 등 SNS 홍보 / (여성 시니어·신중년) 산림분야 업종별 창업가 초청 강연 등
 - 청년대상 창업 프로그램* 운영 및 청년인재 육성사업 확대(4→6명**)
 - * 산림분야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기초부처 실습까지 자율 학습 진행(6개월)
 - ** 한국농수산대학의 산림학과에 현장노하우를 갖춘 신규 퇴직공무원 추가 배치(2명)
- (전문업)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및 신규 자격제도 정착
 - 산림복지전문업의 민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제도 개선
 - 공급자, 수요자 간 서비스전문업 - 국민·기업) 및 일자리 매칭(전문업 - 전문가) 플랫폼
 - 전문업 취약분야(홍보·판로개척) 지원 및 복지전문업 등록 기준 개선*
 - * 등록 : (기존) 전문인력 사무실 → (개선) 교육계획 추가 / 인력 : 산림치유지도사 5→3명 1급 2→1명
 - 산림레포츠지도사, 목재교육전문가 등 신규 자격제도 운영 및 나무의사 정착
- (직접일자리)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제공
 - (취약계층) 산림가꾸기·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(2,656명)하고, 참여자 처우개선을 위한 유급휴일제* 도입
 - * 주휴일 근로자의 날 「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호(1호제외)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
 - (재해일자리) 지역중심의 산림재해 관리에 필요한 현장인력 고용(12,493명)
- (건전한 일자리 환경) 불법행위 근절, 교육·훈련 등으로 건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
 - 산림사업법인 등록·운영, 산림기술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조사(연2회)
 - 현장·실무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*
 - * 벌채·숲가꾸기 등 취약사업장, 미숙련자(6개월 미만) 대상 안전교육 실시(1만명)

임산업의 활력 제고

□ (규제개선)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임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

-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선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전환
 - '규제혁신 3대 유형'(신산업, 기존산업, 민생불편) 관련 규제개선 과제 정비*
 - *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심사 기준 완화,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완화 등
- 기업의 현장애로과제 등에 대한 '규제 정부입증책임제' 추진계획 마련(2월)

□ (목재산업) 소비자 중심의 목재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목재시장을 다변화

- (유통) 산지거점 목재유통 체계를 강화*하고,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**
 - * 남원(우드칩), 평창(한옥부재), 청주(가설재), 가평(우드슬랩), 양평(토포밥) 등
 - ** 목재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플랫폼인 '목재정보 서비스' 신설,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개선
- (업계 지원) 노후시설 현대화(20개소)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원*
 - * 사전상담제 운영, 국가별 가이드 개발,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비영어권 서류 번역비 지원 등
- (신수요 창출) 지역목재를 브랜드화하고, 도시재생 사업에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'목재도시지원단' 운영(지자체와 협의체 구성, 목재이용 조례안 마련 등)

□ (임산물) 친환경 임산물의 유통기반을 확대하고 임산물 소비를 촉진

- (유통)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·가공 시설 지원* 및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(1개소)
 - * 산지종합유통센터 현대화(9개소), 고부가가치 임산물 가공 업체 육성(2개소)
- (품질 관리) 임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단속 및 PLS(농약직권등록제도) 교육·홍보
- (소비 촉진)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구축 및 자조금제도 도입(뽕은감, 표고, 밤)
- (수출)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('20년 까지 9개소) 및 수출 장애요인 해소*
 - *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, 수출임산물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·냉동고 지원 등

3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

【과제 개요】

◆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, 산림분야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

【과제 목표】

◆ 스마트 종자·양묘 체계 구축 : ('19년) 1개 → ('20년) 2개

◆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: ('19년) 1개소 → ('20년) 2개소

◆ R&D 예타 사업 발굴 : ('19년) - → ('20년) 1개 사업



스마트 양묘

스마트 산림관리 확대

□ (제도개선)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산림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

- 산림무인비행장치의 고도 제한 완화* 등 규제를 개선하고, 산림항공본부를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가 양성(현장책임관 39명 운영)

* 산불정보 취득을 위해 1,000m이상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

- 기후변화대응 및 디지털행정 촉진을 위한 (가칭)산림데이터 관리법률 제정 검토

□ (위성 및 빅데이터 등) 농림위성 개발 대응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

- 농림위성 개발*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계획 수립(2월) 및 국가산림위성 관리기반** 조성

* 탑재체 개발('20~'23년) → 발사('23.7월) → 시범운영('23.7~12월) → 정상운영('24.1월~)

** 기초연구('19년) → 기초(상세)설계('20~'21년) → 시공·준공('22~'23년) → 입주('23년)

- 민간-공공 간의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고 유통·개방 확대
- 창업과 연계 등 산림공공 데이터의 지속 발굴 및 개방 확대(98건)

□ (현장적용) ICT,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림경영·관리 확대

- (산림경영)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('19년 용문, '20년 정선)을 확대 하고, 종자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구축('19~'21년)

- (산림재해·산지관리) 드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탐지기술을 고도화하고, 불법산림훼손 및 무단점유지 조사 등 산지관리 시 현장 적용 확대

산림분야 혁신성장 기반구축

- (R&D) 산림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산림과학기술 개발 강화
 - '스마트 산림생명공학 기술개발' 예타사업 추진(총사업비 2,500억원)
 - 산림분야 4차산업 및 서비스 R&D를 발굴하고 현장 눈높이 R&D* 확대
 - *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, 산림분야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특화 인력 양성 등
- (산림탄소)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전략 마련 및 산림흡수원 증진기술 개발
 -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산림관련 의제*의 협상전략 마련
 - * 국가 NDC에 산림분야 감축실적 반영, 산림경영기준선 적용 논리 개발 등
 - 산림소유별 흡수량, 토양 및 목재제품 탄소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 모델 고도화
- (산림생명산업) 원료공급망 구축,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산림생명산업 활성화
 -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(2개소, 10ha)하고,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(1차 옥천, 2차 나주, 3·4차 공모 추진)
 - 산양삼 재배기술, 제품개발, 인증 등을 통합 지원하는 '특화산업 진흥 센터*' 설립
 - * 함양 산삼 향노화 엑스포(9~10월)와 연계한 센터(임업진흥원 소속) 설립으로 지원체계 집약화
- (산림관광) 지역중심의 산림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
 - (산림휴양 관광) 숲여행 팸투어 운영, 국가 숲길 등에 민간공모 사업 집중 지원
 - (산림복지단지) 재생형 국·공립 산림복지단지 모델 확산* 및 여건 마련
 - * 기존 산림휴양·치유 시설을 연계 보완·증설, 국립산림복지지구 지정(6월)
- (석재산업) 원활한 골재 공급 및 석재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
 - 「석재법」 하위법령 마련 및 석재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* 수립
 - * 석재산업 진흥지구 지정, 안전관리·기술개발, 산업부가가치 제고, 인력 양성 등
 - 채석단지 확대(4개) 및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(80개소, 국가안전대진단)

4 안전한 산림,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

【과제 개요】

- ◆ 대형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는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과 산림을 안전하게 보호
- ◆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확보

【과제 목표】

- ◆ 대형산불 제로화 : ('19년) 3건 → ('20년) 0건
- ◆ 사방댐(296개소), 계류보전 사업(320km) 등으로 산사태 예방
- ◆ 백두대간(9개소), DMZ(291ha), 도서·해안(40ha) 등 산림복원



산불대응(산림헬기)

산림재해로부터 국민과 산림을 보호

□ (산불) 대형산불 예방 강화 및 산불진화 역량 제고

- (예방) 야간산불, 취약지 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한 산불예방 체계 구축*
 - * 열화상드론 확대(10대), 드론산불예찰단 운영, 빅데이터기반의 입산통제구역 조정 등
 -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예방임도 설치(65km)
- (진화) 산불진화자원을 확보*하고 산불진화인력의 근무환경 개선**
 - * 산림헬기 50대('25년),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대('19년 : 300명 → '20년 435명), DMZ 산불대응시설 조성('20~'22)
 - **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규직 전환('20년 160명), 진화대원 대기쉼터(51개소), 방염안전장비 제공 등
- (협업) 지자체의 산불진화 역량 강화* 및 농림부 등과 함께 영농부산물 제거
 - * 시·도 주관 산불진화 통합훈련 산림부서장의 산불교육 강화, 산불발생 시 현장대응 평가단 파견

□ (산사태)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·대응 강화

- (예방)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기초조사(5천개소) 및 산사태 예측력 제고*
 - * 산악기상관측망 설치(50개소) 및 산림유역단위 기반의 산사태 위험지도 고도화
 -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

- (대비)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실시*(우기 전 완료)하고, 해안지역 피해 저감을 위한 해안방재림(10ha)·해안침식 방지사업(12km) 추진
 - * 사방댐 296개소, 계류보전 320km, 산림유역관리사업 25개소
- (대응·복구)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지원('20년 예산 300억원)
 - '19년 산사태발생지(156ha)는 우기 전에 복구하고 현장지도·점검 실시

□ (산지관리) 재해발생 억제를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관리 강화

- (태양광) 1ha 이상의 산지태양광시설은 산지관리전문기관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, 시기별(해빙기, 장마철·호우기)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
 - 산지태양광 시설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주변식생 모니터링
- (풍력)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던 부대시설(진입로 등)을 풍력발전시설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여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

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

□ 산림복원 기반구축 및 한반도 산림생태축 보전·복원

-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 기술교범, 표준품셈 마련
- 산림복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(4월) 및 산림생태복원 포럼 개최(11월)
- 백두대간, DMZ일원, 도서·해안지역 등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*
 - *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 2개소, 백두대간 복원 등 18ha, DMZ 38ha, 도서·해안 40ha

□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관리 및 산림보호 강화

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정맥·도서지역, DMZ를 중심으로 30만ha까지 확대*하고, 핵심·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하여 관리**
 - * 중장기 확대계획 : ('22년) 20만ha → ('25년) 25만ha → ('30년) 30만ha
 - ** (핵심구역) 보호위주 / (완충구역) 탐방활동, 희귀수종 증식 등 허용

- 민북·DMZ지역의 생태·지리 정보를 DB화하고 희귀·특산식물의 자생지 보전* 및 고산침엽수의 현지의 보전** 추진

* 자생지 보전 : 독미나리, 눈잣나무, 모데미풀 등

** 현지의 보전 : 구상나무, 눈향나무, 등대시호, 왜솜다리, 만병초 등

- 국립세종수목원 등 권역별로 국가수목원을 확충*하고 보호수 관리** 강화

* 국립세종수목원 준공(20년), 국립새만금 수목원(~26년) 기본설계,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구상

** 보호수 재난피해 보상 방안 마련(행안부 협의), 우수한 보호수 선정 및 관리방법 공유

-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* 및 국유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·온라인상 산림불법 행위 등 단속 강화**

* (실태조사) 부산, 울산, 경남 등 13개 명산

(수거·처리) 인천, 강원, 전북, 전남지역 36개 명산 내 3천2백톤 수거·처리

** 항공사진을 통한 불법훼손지 정리, 시급한 현안은 기획 수사 및 검·경 합동 단속 등 추진

□ (소나무재선충병)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·방제 실시 및 인위적 확산 차단

- 피해정도, 신규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예찰을 실시*하고, 선단지 등 중요지역은 국가-지자체 합동으로 정밀예찰 실시

* 광역범위 :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정밀조사 / 선단지 미발생 지역 : 전자예찰함을 활용

- 피해지역은 방제기간(내륙 3월, 제주도 4월) 내 피해목을 전량방제하고, 신규(재)발생 방지를 위해 피해지역은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 실시

-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더미 이력관리* 및 이동단속 강화**

* 훈증방제 대장 기록·관리 및 훈증더미 수집·처리 실시(21.5만개)

** 미감염확인증 고유번호와 QR코드 부착으로 감염목 불법 유통 방지

□ (일반병해충 등) 외래·돌발병해충 및 일반병해충 피해 최소화

- 외래·돌발 병해충은 농진청 등과 '방제대책 협의회'를 운영하여 공동 대응*

*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범사업 실시(1,050ha)

- 솔껍질깍지벌레는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실시(4개소, 75ha)

5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

【과제 개요】

- ◆ 도시숲·정원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
- ◆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원하는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

【과제 목표】

- ◆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및 정원 확대*
* 미세먼지 차단숲 93ha, 스마트 가든볼 336대, 실내외 정원 12개소
- ◆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: ('19년) 700개소 → ('20년) 747개소
- ◆ 산림복지프로그램 이용자 : ('19년) 661만명 → ('20년) 774만명



통합예약(숲나들e)

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

□ (도시숲)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

-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(6개소 설계, 조성 11개소)·차단숲(93ha) 조성
- 바람길숲·차단숲 사업지 컨설팅 및 점검(매월 2~3회)으로 사업 정착 도모
- 생활권 주변 국유지에 도시숲을 조성(5개소, 30ha)하고, 가로수 조성·관리 매뉴얼 정비 및 실무교육 강화로 지자체의 가로수 관리 전문성 제고

□ (정원) 국민이 참여하는 정원사업 추진 및 생활 속 녹색 휴식공간 확충

-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원 작가, 전공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원 조성 사업(5개 지자체, 25개소)을 추진하고 참여자의 진로 모니터링 실시
- 유희부지, 공공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 실내·외 정원 조성(12개소)
- 산단 입주기업, 공공시설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가든볼* 보급(336대)

* 관수, 조명, 공조, 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가든볼의 자동관리 기술 도입

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

- **숲나들e,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확대**
 - 국·공·사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레포츠, 숲길, 100대 명산 등산로 등의 정보제공까지 서비스 확대
 - (주) 카카오와 협업하여 산림휴양시설 주변의 관광정보 수집(약 300만건) 및 산림휴양시설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구축
 -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확대(4만명, 전년 대비 14% 증)하고,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‘찾아가는 산림복지 서비스’ 시범사업* 확대
 - * (‘19년) 16개 산림복지전문업 연계, 500명 이용 → (‘20년) 30개 업체 연계, 2,000명 이용
 - 사회적 약자(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)의 국립산림복지 시설 우선적 예약 체계 구축(국립산림복지시설의 20%) 및 장애인 나눔 객실을 확대*
 - * 장애인 나눔객실(누계) : (‘19년) 35개 휴양림, 75객실 → (‘20년) 37개 휴양림, 84객실
- **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(747개소) 및 서비스 품질 향상**
 - 생활SOC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생활권 주변의 산림휴양 시설확충
 - * 휴양림(누적) : (‘19년) 174개 → (‘20년) 181개 / 숲속야영장(누적) : (‘19년) 3개 → (‘20년) 4개
 - 기존 휴양림 내 시설확충 및 노후 시설 보완(국립 41개소, 공립 72개소)
 - 국립자연휴양림을 지역의 생활·문화·창업공간*으로 개방하고 상생방안** 마련
 - * 예시) 유명산휴양림 내 청년 창업 공간(가라바라, 자온비즈)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
 - ** 국립자연휴양림 주변 마을공동체 특산물판매장 운영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(23개 휴양림)
- **국가 숲길·DMZ트레일 운영 및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**
 - 생태·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·운영*하고, DMZ 트레일(인제)은 편치볼둘레길, 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하여 시범운영**
 - * 지정 : 백두대간마루금등산로, 지리산둘레길 등 / 운영·관리 : 숲길관련 전문기관 위탁
 - ** 시범운영 : 5~10월, 가이드 탐방제(1회 20명 내외)
 -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(204명)하여 등산·트레킹 교육을 실시하고,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(산림항공본부, 대한산악구조협회) 구조체계 구축

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

- (산림교육) 생태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
 - 관계부처·기업(교육부, 법무부, 현대차 등) 등과 산림교육 협업을 실시하고,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산림교육 전달체계 마련
 - * '곤충·새·꽃·나무 이름 알기' 정보 제공,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추진방안 수립
 - 지자체 중심의 유아숲체험원 조성(25개) 및 안전·유지 관리 기준 강화*
 - * 3년 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(22개)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유아숲체험원 입지조건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제외하는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
- (산림치유) 산림치유 민·관 협력 체계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
 - '산림치유 장기계획 수립*' 및 「치유의 숲 협의회**」 운영
 - * 산림치유 시설운영 및 품질 관리, 도심형 복합산림치유공간 조성, 숲태교 법제화 등
 - ** (현재) 조성·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위주 → (변경) 정책 제안 및 실행체계 개선 강화
 - 사회보장 재원을 활용한 생활권 산림치유서비스 시범 운영
 - 지리산·덕유산 권역 산림치유원(진안)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
 -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연계형(화순) 치유의 숲, 생활권(부산) 치유의 숲 조성
- (산림레포츠) 안전한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충 및 특화 종목 발굴·육성
 - 복합산림레포츠 시설조성(9개소) 및 산림레포츠 시설 일제점검*(휴가철 이전)
 - * 대상 : 복합산림레포츠 시설, 산림레포츠의 숲, 테마임도, 산림레포츠 길, 자연휴양림내 시설 등
 -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대회(5개 종목) 및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대회(10월, 국립등산학교) 개최 등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특화 종목 발굴
- (수목장림)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민 캠페인 실시
 -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의 조성·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·산림청 공동으로 부령 규정 마련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)
 - 언론·시민단체(상조박람회, 시니어복지 박람회 등)와 수목장림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고,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(15개소) 추진

2

현안 과제

1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

□ 개요 및 현황

- 가리왕산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은 사회적 합의*와 법률**에 따라 복원하기로 하였으나,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서 사후 활용을 요구

* 부지 선정 때부터 가리왕산의 대안지(영월 만항재 등)가 제안되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, 대안지 조사 자문단(산림청, 강원도, 환경단체 등)을 통해 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 이용에 합의

** 산지관리법 제14조(산지전용허가) 제2항에 따라 복원을 조건으로 산지전용 허가
국유림법 제21조(국유림의 대부 등)에 따라 일시사용허가('14.5.16~'18.12.31)

- 강원도의 입장 변경으로 복원사업의 지연 및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어 국조실 주관으로 협의회*를 구성·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

*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출범('19.4.23) / 국조실·산림청·환경부·강원도 및 정선군, 주민대표, 환경단체, 갈등관리·법률·환경 등 전문가 참여

□ 쟁점(또는 문제점)

- **(쟁점사항)**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에 대한 전면복원과 시설물 존치 대립
 - 강원도·정선군 : 올림픽 유산 보존을 위해 곤돌라 전면존치 요구
 - 환경단체 : 사회적 약속과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전면복원 요구
- **(협의 지연)** 정선군은 곤돌라 전면존치 외의 협의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함('19.11)에 따라 협의회 차원의 협의 지연

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합의 도출 노력 및 주민 설득 지속*
 - *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 등 다각적인 소통 및 설득 채널 운영
- 협의회 경과사항의 명확한 전달 및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언론브리핑, 공론화(소규모 공론조사 또는 정보제공형 여론조사) 등 추진

② 봄철 산불방지 대책

□ 현황 및 추진경과

- 매년 산불의 64%가 봄철에 발생하며, 지난해는 최근 10년 대비 51% 증가*

* 봄철 평균 : (최근 10년) 283건, 766ha → ('18년) 303건, 712ha → ('19년) 428건, 3,095ha

- 입산자 실화와 무단소각에 의한 산불이 산불발생 원인의 48%를 차지*

* 봄철 최근 10년 평균 : 소각산불 25% > 입산자 실화 23% > 건축물 화재 3%

- 풍등, 전력설비* 등 산불원인 다변화에 따라 「산림보호법」 개정**

* (풍등) '18.10월 고양시 저유소 화재, (전력설비) '19.4월 고성·속초 산불 등

** 풍등 등 소형열기구 사용제한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설치 근거 등 「산림보호법」 개정

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대형산불 위험지역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산림관리 추진

- 산불예방임도를 설치(65km)하고 내화수림대 조성 등으로 임상 개선 추진

- 인력중심의 산불예방에서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불방지 활동 강화

- 산불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제구역 설정, 드론·지능형 CCTV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(드론예찰단 및 산불감시카메라 1,448대 운영 등)

- 전력설비, DMZ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유관기관*과 협업하여 대비

* (산업통상자원부) 전력설비 안전강화 대책, (국방부·한미연합사) DMZ 산림헬기 투입 간소화

- 정부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예방 활동 강화

- 주민참여 캠페인, 영농부산물 공동수거,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활성화* 등

*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('14~'19년) 2만2천개 선정·포상,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

IV.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

▶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가 확산됩니다.

경제림에 산림사업 집중(71%)



임가소득
(‘19) 3,648 → (‘20) 3,830만원



PFI의 UN
아젠다화



▶ 임업·산촌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.

전문임업인
(‘19) 16,351 → (‘20) 18,000명



산림분야 전문업
(‘19) 10,805 → (‘20) 11,345개



사회적경제기업
(‘19) 173 → (‘20) 250개



▶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가 마련됩니다.

스마트양묘
(‘19) 1 → (‘20) 2개



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
(‘19) 1 → (‘20) 2개소



R&D 예타사업 발굴
(‘19) - → (‘20) 1개 사업



▶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가 구축됩니다.

DMZ일원 산림복원
(‘19) 253 → (‘20) 291ha



대형산불 제로(zero)
(‘19) 3 → (‘20) 0건



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
(‘19) 49 → (‘20) 31만본



▶ 산림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.

생활권 도시숲·정원 확대
(‘19) 116 → (‘20) 173개소



산림복지인프라 구축
(‘19) 700 → (‘20) 747개소



산림복지프로그램 이용자
(‘19) 661 → (‘20) 774만명

